

## □ 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방향 | 01

### I. 머리말

### II. 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방향

1. 2024년 세계 거시경제 지표의 향방 유동적
2. 미-중 경쟁 격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확실성 고조
3.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 확대
4. 자국우선주의 기반 보호무역주의 전세계적 확산
5. 경제안보에 근거한 투자심사강화 기조 지속
6. 기후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별 규범 강화
7.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외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강화

## □ 2023년 하반기 주요 통상일지 | 09

## □ 2024년 세계 주요 경제 · 정치 일정 | 12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기조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기관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방향

## I. 머리말

포스트 팬데믹의 첫 해인 2023년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개막하였고, 갈등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전세계적으로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팽배한 한해였습니다. 2024년에는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재편은 물론, 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에 서고자 하는 국가들 간 주도권 경쟁과 이합집산으로 2023년 못지 않게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에 촉발된 여러 지정학적 변화와 국가별 대응 입법들은 2024년에 들어 비로소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속에는 여전히 다양한 리스크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와 주요 비즈니스 대상국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그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식별하여야 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통상규범을 감안하여 ESG 경영은 물론, 외국기업과의 인수·합병, AI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응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 II. 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

### 1. 2024년 세계 거시경제 지표의 향방 유동적

#### ■ 세계경제 성장 둔화 전망 속 금리인하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024년 세계경제가 2.7-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1.4%에 못 미칠 것이며 신흥시장 및 개도국 경제도 2023년보다 낮은 4.0%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IMF와 OECD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노동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전쟁으로 인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으며 핵심 물자의 공급망 차질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소 안정되고 있어 2024년 중에 미국의 금리인하 정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외채 부담이 늘어난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 세계 무역은 성장, 그러나 노동인력 부족현상 심화

세계무역기구(WTO)는 2023년에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 종식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상품 교역의 회복을 촉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2024년에는 오히려 상품 교역이 비교적 큰 폭인 3.3%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아시아(5.1%), 중동(3.8%), 북미(2.7%), 유럽연합(EU)(2.2%) 순으로 상품 수출이 성장하고 상품 수입은 아시아(5.8%), 중동(4.6%), 남미(3.3%), 북미(2.2%), EU(1.6%)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 이어진 조기 은퇴, 실업수당 및 정부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요인이 노동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저하시켰다. 따라서 2024년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는 노동력 부족, 특히 기술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호 원장

T. 02-6386-6680

E. [taeho.bark@leeko.com](mailto:taeho.bark@leeko.com)

약력보기 ▶



임채민 고문

T. 02-6386-6630

E. [chemin.rim@leeko.com](mailto:chemin.rim@leeko.com)

약력보기 ▶



최석영 고문

T. 02-6386-6620

E. [seokyoung.choi@leeko.com](mailto:seokyoung.choi@leeko.com)

약력보기 ▶



이태호 고문

T. 02-772-4396

E. [taeho.lee@leeko.com](mailto:taeho.lee@leeko.com)

약력보기 ▶

- 2024년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대한 수출전략 수립: 인도(6.3%), 필리핀(5.9%), 베트남(5.8%), 우즈베키스탄(5.5%), 인도네시아(5.0%), 베네수엘라(4.5%), 카자흐스탄(4.2%), 사우디아라비아(4.0%), 아랍에미리트(4.0%) 등
- 기술 인력 부족에 대비한 기존인력의 활용도 제고: 기존 인력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향상(Upskilling)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Reskilling)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행

## 2. 미-중 경쟁 격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확실성 고조

### ■ 서방의 중국 경제 전략에 따른 핵심원자재 · 첨단기술 탈중국화

미-중간 전략 경쟁은 2024년에도 지속되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과정에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게 될 것이다. EU도 ‘핵심원자재보호법(CRMA)’ 등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능력을 확대하여 공급망 내재화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이 2024년에는 발효될 전망이며, 이 밖에도 칩4(CHIP4) 동맹,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G7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플랫폼,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서방 국가간 대중국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간 첨단기술 경쟁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 AI, 양자컴퓨터, 바이오 기술로 확장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국가들은 지난 9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는 등 물류체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 무력충돌, 각국 선거, 글로벌 사우스 연대 강화 등 국제정치관계의 파급력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간 갈등 심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무력충돌의 가능성 또한 매우 커졌다. 이 두개의 분쟁은 비교적 제한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국제 역학관계 여파에 따라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리더십 교체를 위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11월에 개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방 의회 선거가 국제통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U 의회 선거와 집행부 교체에 따라 향후 EU의 기후변화나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대만에서는 1월 국가원수(총통) 선거를 실시하는데, 양안관계와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AU)이 G20에 가입하고 BRICS회원국도 확대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또한 2024년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 리더로서의 역할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에너지 공급 및 사이버 안보 위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화석연료시장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에 따라 화석연료 공급망 구조가 급변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기창 외국변호사

T. 02-772-5904  
E. [kichang.chung@leeko.com](mailto:kichang.chung@leeko.com)

약력보기 ▶



주현수 변호사

T. 02-6386-6363  
E. [hyunsoo.cho@leeko.com](mailto:hyunsoo.cho@leeko.com)

약력보기 ▶



박정민 변호사

T. 02-772-4916  
E. [jungmin.pak@leeko.com](mailto:jungmin.pak@leeko.com)

약력보기 ▶

공격을 통해 보였듯이, 에너지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 타격을 비롯한 하이브리드 전술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렇듯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기 의식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전쟁의 양상 또한 바꾸었다.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정보작전을 총칭하는 사이버 전쟁은 네트워크 전쟁이라고도 칭하며 저비용으로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제안보 경쟁도 해킹, 랜섬웨어 등을 통해 사이버 영역에서 격화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국가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중간 탈동조화 추세가 심화될 것임에 비추어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예방적, 선제적, 입체적 대응전략 모색:** 지정학적 위기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조직과 대응 인력의 강화 등 위기대응 체제 강화
- **무역 및 투자전략의 재검토,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기업전략 재편성:**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과 같이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다양한 소싱(sourcing)을 고려하고, 핵심산업과 제품관련 GVC의 5대 리스크(공급, 수요, 처리, 통제, 환경)에 대한 분석 및 포괄적 대응 수립

### 3.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 확대

#### ■ 국가 간 공급망 연대 움직임과 중국의 대응

효율성 극대화를 바탕으로 한동안 확장·강화되어온 글로벌 공급망 체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기후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미-중간 전략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 현상으로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들은 2024년에도 국내입법과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뿐 아니라, 동맹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연대·협조체제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도 이러한 서방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자국의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세계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자국 자원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행동을 언제든지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주요국의 반도체 및 핵심원자재 수출통제 증가

미국의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는 2024년에도 더욱 확장 및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등을 통하여 외국에서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출/재수출 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경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도 미국에 동조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를 마친 뒤 2024년에는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또한 2023년 7월부터 중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2023년



**박정현 변호사**  
T. 02-6386-6649  
E. [junghyun.park@leeko.com](mailto:junghyun.park@leeko.com)

약력보기 ▶



**허난이 연구위원**  
T. 02-6386-6451  
E. [nyhur@leeko.com](mailto:nyhur@leeko.com)

약력보기 ▶



**박수령 연구원**  
T. 02-6386-6515  
E. [sooryung.park@leeko.com](mailto:sooryung.park@leeko.com)

약력보기 ▶

7월부터 반도체 재료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미국과 똑같은 명분인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흑연 재료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를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통제의 활용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러시아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제재 지속**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세계 46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금융거래 제재, 수출통제, 중앙은행·국부펀드 제재, 인적 제재, 에너지 제재 등이 전방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수출통제, 천연가스 공급 제한, 비우호국 지정 및 기업 제재 등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수출통제와 더불어 기술 유출의 우려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2023년 10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제조와 밀매에 관여한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1년부터 시행한 '반외국제재법'을 통하여 그러한 결정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해 중국 내 자산 동결 등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이러한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한 세부 점검 및 최적화 전략 수립:** 기업의 기존 공급망 체계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민첩성, 가시성을 점검하고 공급원 전환, 적정 비축량 산정 등 구체적인 공급망 최적화 전략 수립
- **포괄적인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수행:** 조달 품목에 관련된 직간접적 원천까지 포함하여 우려국으로부터 원자재 수급을 제한하고 동시에 불투명한 공급망으로부터 원자재 조달 여부 모니터링 수행

4. **자국우선주의 기반 보호무역주의 전 세계적 확산**

■ **관세 인상 및 무역구제조치 활용 등 보호무역조치의 전 세계적 확산**

미국의 경우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인권, 노동, 환경 보호 분야에 대한 수출국의 법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경우 2023년부터 시행된 역외보조금 규정에 이어 EU 배터리법 또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 EU 의회 선거 및 집행부 선출을 앞두고 다양한 수입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의 경우도 2023년 8월 멕시코에서 철강을 비롯한 392개 품목의 관세를 예고 없이 기습 인상했으며, 2024년에도 각 품목별 양허세율까지 추가로 인상할 여지가 있다. 동남아의 경우, 배터리 원료 등의 소재가 되는 광물의 수출제한 등 자원 민족주의에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가 예상된다. 인도의 경우 2023년 2월 사전 예고 없이 수입산 자동차 관세인상 조치를 취한데 이어 랩탑, 태블릿, PC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2024년에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의 본격적 시행과 상계관세 전쟁가능성**

2024년에도 미국, EU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자국 산업보호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육성법, 그리고 인프라법(IIJA) 등이 그 결과물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에도 핵심상품에 대한 미국의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의 보조금을 쏟아 붓는 산업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판 IRA이라고 불리는 '녹색산업법안'은 명분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내세우지만 그 실질은 유럽내 또는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2023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하였지만 직전까지 약 38조6천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배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핵심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은 필연적으로 상계관세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 **주요 수출대상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초기단계부터의 대응 및 관리:** 주요 수출대상국 및 주요 글로벌 공급망 국가들의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 **공급망 재편성 기회 및 주요국 산업정책의 적극 활용:**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산업정책상 규제와 지원 동향을 파악하고, 수혜요건을 면밀히 검토(예: 미국 IRA상 FEOC 요건 등), 해당국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 5. 경제안보에 근거한 투자심사강화기조 지속

### ■ 미국의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심사 강화

미국은 자국내 중국의 투자(inbound)를 규제하는데 이어 자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outbound)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여 미국으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를 강화한데 이어,<sup>1)</sup> 자국민의 대중국 투자에 대해 국가안보심사를 가능케 하는 '국가 핵심역량수호법(NCCDA)'이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sup>2)</sup> 지난 8월에는 첨단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산업기술 분야에서 미국인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2024에는 세부규정이 발표되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1) 해당 의무의 적용을 받는 미국인('US Person')의 범위(특히 미국인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가능성을 고려), (2) 우려 단체에 관한 지정, (3) 규제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예: 자본(equity)으로 전환 가능한 대출 투자, 합작법인(JV) 설립, 간접 투자 등), (4) 규제대상 기술 및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및 해외투자 규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2024년에 경기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또한 미국과 같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과정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일례로 2020년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은 국가안보 관련 심사 절차를 규정으로 포함시켰다. 최근 중국 또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해외(outbound) 투자에 대해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2022년 시행된 '사이버보안 심사방법'이 그 결과이다. 또한 같은 해부터 시행된 '국가간 데이터이전 보안평가 방법'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중국 으로부터 해외로 진출하는 투자자본도 보안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2024년에는 중국도 필요한 경우 투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미국과 중국으로의 해외투자 고려시 안보심사 절차 숙지:** 각 국가별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와 고려 요소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적 자문을 통해 불확실성 감소 및 불필요한 비용 절감 도모
- **우리 기업들을 위한 투자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참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안보 요소와 관련된 심사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 기업의 이해관계 반영 노력 경주

## 6. 기후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별 규범 강화

### ■ EU와 미국의 경쟁적인 그린통상정책

EU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는 물론, '탄소중립산업법(NZIA)'까지 다양한 통상관련 법안들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2024년은 특히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CBAM의 전환기간으로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에 대한 실질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가 도입 추진 중인 '공급망실사법(CSDDD)'은

기업들에게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실사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2022년 발효된 미국의 IRA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재정지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역내 공급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소 보호무역적인 요건들이 수반됨에 따라 2024년에도 이해관계국가들과의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EU는 탈탄소 철강 생산을 위한 글로벌지속가능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EU CBAM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 등과 관련하여 2024년까지도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UNFCCC COP 28)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가 채택된 만큼, 세계적으로 그린통상정책 개발 및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권 관련 통상 규제의 지속적 확산**

최근 글로벌 통상체제에서는 인권 또한 중대사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에게도 인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역외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2018년 제정된 미국의 ‘수출통제개혁법(ECRA)’상 ‘인권 보호 및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 수출통제와 함께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언급한 EU의 CSDDD는 환경 문제와 더불어 인권에 관해서도 기업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으로서, 최근 2023년 12월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 간 잠정 합의가 도출되었다. EU 역내 순 매출액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들에게도 민사책임과 제재가 적용되는 등 조치는 2024년 중에 유럽 의회 및 EU 이사회 최종 표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 **환경 및 인권 관련 규범이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공급망 및 생산 방식과 설비 등을 점검하여 탄소배출 및 인권 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탈탄소 전략과 ESG 경영제도 기반 하에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

- **민·관 협의를 통해 환경·인권 국제규범 정립과정에 합동 대응:** 기업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환경 및 인권 관련 국가별 정책과 국제규범 수립 과정에 대응

7.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외 통상규범 논의 강화**

■ **미국과 EU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경쟁**

2023년 12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발표되었지만, 일부 쟁점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어 추후 논의 동향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데이터 국경간 이동 자유화 및 소스코드 보호에 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였는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미국의 유동적인 입장이 2024년에는 어떻게든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DSA는 2024년 모든 디지털 서비스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처럼 EU의 디지털 전환/디지털 경제 관련 국내법 체계 정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정보보호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논의**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협상 진척이 부진함에 따라 그간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미-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그리고 현재 협상 중인 미-EU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은 양자협정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서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금지 의무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이어 최근 EU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2024년 새로운 양자 규범 제정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4년 2월 개최될 WTO 제13차 각료회의(MC13)에서 국경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moratorium) 영구화에 회원국들이 합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 새로운 디지털 통상 의제, AI

2023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제1회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 등 AI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장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AI 규제의 조화가 새로운 디지털 통상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에 관한 포괄적 규제 법률안(EU AI Act)에 대해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 간 잠정 합의가 도출되어 입법화를 앞두고 있고, 미국도 지난 10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규제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중국 및 우리나라도 AI 규제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AI 관련 국제 표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규제는 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2024년에 전개될 디지털 통상규범에 관한 국제논의에서는 그간 지속되어 온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서 AI 규제 관련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디지털 경제 관련 국내외 규범 논의 동향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모색:** 디지털 규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EU의 경우 법안 마련 이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피력
- **디지털 경제 관련 각국의 규제 법령에 대한 준수 점검 및 위험 관리 체계 마련:** 온라인 플랫폼 확산 및 AI 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입되는 각국의 규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

- 1)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3), “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 (CFIUS) 가이드북” 참조. ([링크](#))
- 2) 구체적으로 미국의 해외투자규제조치에 대해서는 “[광장 경제안보 TF] Issue Brief 시리즈 ④ 경제안보와 주요 조치 분석: 미국의 해외투자 (outbound FDI) 규제 조치를 중심으로” 참조. ([링크](#))

<용어정리>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화인민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칭하는 말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세조정메커니즘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
DMA	Digital Market Act	EU의 디지털시장법
DSA	Digital Service Act	EU의 디지털서비스법
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미국의 수출통제개혁법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환경, 사회, 거버넌스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	미국의 해외직접생산규정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해외우려기관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미국의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
GSSA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	미·EU간 협상중인 글로벌지속가능철강·알루미늄협정
GVC	Global Value Chain	글로벌가치사슬
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의 인프라법
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RA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JV	Joint Venture	합작 법인
MC13	WTO's 13th Ministerial Conference	제13차 WTO 각료회의
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NCCDA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
NZIA	Net-Zero Industry Act	EU의 탄소중립산업법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별시장상황
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무역기술위원회
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 2023년 하반기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10.11	 한국 ·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10.11	 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국적 반도체 기업에 1년간 수출 통제 한시적 유예 발표
10.14	 한국 · 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10.16	 한국 · 영국, 양국 무역 무관세 적용 2025년까지 연장 합의
10.17-10.18	 중국,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 개최
10.17	 중국 · 세르비아 FTA 서명
10.17	 미국,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10.20	 미국-EU 정상회담 개최
10.22	 한국 · 사우디아라비아, 정담회담 계기로 양국 기업, 첨단산업 MOU · 계약 51건 체결
10.24	 미국, AI반도체 수출통제 시행
10.25	 중국, 아시아 · 아프리카 · 남미 10여개국과 철광석 · 니켈 등 핵심 광물 협정 체결
10.25	 미국,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제안 지지 철회
10.26-10.27	 EU 27개국 정상회의 개최
10.30	 미국, 아프리카 4개국에 대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무역 특혜 철회
10.31	 한국 · 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11.2	 미국 對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
11.7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
11.11	 중국 · 사우디아라비아 9조 규모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11.13	 미국 ·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11.13	 EU,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 타협안 합의
11.13-11.14	 IPEF 장관회의서 '청정경제 협정' 및 '공정경제 협정' 타결
11.15-11.17	 APEC 정상회의 개최 및 '2023 골든게이트 선언' 채택
11.16	 일본 · 중국 정상회담 개최
11.24	 한국 · 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 ▣ 2023년 하반기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11.27	 일본 · 베트남 정상회담 개최
11.28	 싱가포르 · 메르코수르 FTA 협상 타결
11.29-12.1	 한국 · 칠레 FTA 개선 협상
11.30-12.13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개최
12.1	 중국, 흑연 수출통제 시행
12.1	 미국, IRA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 발표
12.4	 한국 · 중국,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 구축 합의
12.6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 공식 탈퇴
12.7	 EU · 중국 정상회담 개최
12.8	 EU, 세계최초 '인공지능법(AI Act)' 최종 타협안에 합의
12.11	 WTO 주요국 통상장관 회의 개최
12.13	 EU · 칠레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서명
12.14	 유럽의회 및 집행위 간 '공급망실사지침(CSDDD)' 3자 협상 타결
12.14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잠정 가이드스 발표
12.18	 일본 · ASEAN 제1회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 정상회의 개최
12.18-12.21	 한국 · 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공식 협상개시
12.18	 EU · 케냐 경제동반자협정(EPA) 서명
12.18	 EU, 제12차 대러 제재 공식 채택
12.18	 2027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계획 발표
12.20	 한국 · 아프리카 '제2차 한 · 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 개최
12.20	 중국 · 니카라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12.21	 중국, 대만산 12개 품목 관세감면 중단
12.21	 중국,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
12.25	 EAEU · 이란 FTA 체결

## ▣ 2023년 하반기 주요 통상일지

날짜	내용
12.26	 대만, 對러시아 45개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확대
12.26	 美,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2024년5월 31일까지로 연장
12.27	 EU, 중국發 통상 보복 대응을 위한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시행
12.28	 한국 · GCC FTA 협상 타결
12.28	 美 · EU 철강 및 알루미늄 무관세 조치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 □ 2024년 세계 주요 경제 · 정치 일정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EU 공급망실사법(CSDDD)' 2024년 내 채택 예정

##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발간 목록

### ❖ 2023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국제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경쟁법 입법 동향: 미국과 EU의 사례 분석	정환 변호사(광장) 김영서 변호사(광장) 정문경 연구원(광장)	2023.10
2	EU의 新통상법 추진 동향과 우리의 대응	허난이 연구위원 박수령 연구원 문희은 연구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3.5
3	[Special Issue Brief]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in a Changing World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23.2
4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 2022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해외투자심사제도의 도입 추진 및 평가와 전망: 미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고준성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2022.9
2	[Special Issue Brief]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8
3	[Special Issue Brief]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해설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박정민 변호사(광장)	2022.7
4	대(對) 러시아 제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	이재원 선임전문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5
5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2
	EU 탄소국경조정세 (CBAM)의 시사점과 대응 방안	이상준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1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he U.S.-China Strategic Confrontation on Trade: How Supply Chains Became Strategic National Resources under Trump, and How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and Expand That Policy	J.Scott Maberry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LLP)	2021.7
2	CPTPP와 국영기업	정기창 외국변호사(광장)	
3	[Special Issue Brief]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양자 '디지털무역협정'의 등장과 최근 논의 동향	곽동철 교수(경북대학교)	2021.5
4	미국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과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설동근 변호사(광장) 이준용 외국변호사(광장) 김상민 변호사(광장)	2021.4
5	중국 수출통제법을 통해 본 중국 통상환경 동향	김윤희 박사(KOTRA)	
6	[Special Issue Brief] 브렉시트 이후 영국 및 EU의 대외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21.2
7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1.1

❖ 2020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RCEP 서명의 의미와 시사점	강문성 교수(고려대학교)	2020.12
2	[Special Issue Brief] 바이든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한 워싱턴과 브뤼셀의 시각 • Trade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S and the Implications to the Korea-US Trade Relations • Biding Time for Biden's New Trade Agenda	Joel D. Kaufman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이호석 박사(ECIPE)	
3	The Reshuffle of GVCs in the Era of US-China Decoupling and COVID-19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2020.10
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Global Value Chain 현황과 변화 전망	이항구 연구위원(한국자동차연구원)	

5	USMCA 발효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강준하 교수(홍익대학교)	2020.7
6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안유화 원장(중국증권행정연구원)	
7	[Special Issue Brief] The USMCA: An Introduction to the Rules of Origin for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R.O. Cunningham 변호사 G.S. McCue 변호사 Z. Simmons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8	Brexit: The imminent crisis in the EU-UK trade negoti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2020.3
9	우리나라 기업지원프로그램의 보조금 특성성 사례분석 및 시사점	조영재 변호사(광장)	
10	2020년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0.1
11	[Special Issue Brief] 미-중 경제 · 무역협정: 주요 내용 및 분석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2019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맞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디지털세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박정준 연구원(광장)	2019.8
2	[Special Issue Brief]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이재원 연구원(광장)	
3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미중(美中) 무역분쟁, 그 다음 수순은?	이재민 교수(서울대학교)	2019.7
4	미중(美中) 무역협상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장윤종 원장(포스코경영연구원)	
5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ébastien Miroudot 박사(OECD)	
6	미국 보호무역조치의 새로운 무기(new weapon), 통화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주현수 변호사(광장)	

7	BREXIT의 배경, 현황 및 전망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19.5
8	BREXIT에 대비한 “무역연속성협정”: 영국-칠레 간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9	WTO 개혁 논의: 상소기구 개혁을 중심으로	김혜수 변호사(광장)	
10	CPTPP on the Go: Next Step is Enlargement	Shujiro Urata 교수(와세다대학교)	2019.1
11	The USMCA: What it Tells us about U.S. Trade Policy and What it Means for Korea	Richard O. Cunningham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12	미국의 독자적 경제 제재와 기업의 딜레마	이현송 변호사(광장)	

❖ 2018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argeting China	Jeffrey J. Schott 박사(PIIE) Lucy Lu 애널리스트(PIIE)	2018.10
2	Moving from One Landmark to the Next: What the New EU-Japan EPA Mea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3	국제통상과 안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정기창 변호사(광장)	
4	최악의 세계무역환경과 우리의 대응	박태호 원장(광장)	2018.7
5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규제 현황과 평가	최석영 고문(광장)	
6	EU의 무역구제규범의 현대화: 최근 규범 개정에 대한 분석 및 WTO 합치성 검토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